

◎◎◎◎ 농약업계 부당 피해 예상

KIST 지적 농약 잔류허용량 기준 설정 안돼

식품이나 농약에 농약의 잔류허용량이 설정되어 있지않아 국민보건을 위한 식품의 농약오염 계측이 어려워 농약업계의 부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6.13 매일경제>.

KIST가 조사한 「우리나라 식품의 잔류농약 오염현황」에 따르면 농약에 의한 식품오염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농약의 잔류허용량이 설정되어 있지않아 과학적인 농약의 사용규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위생의 위협도를 예측하지 못할뿐아니라 외국에서 어느 특정농약의 잔류성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나라에서는 해당농약의 사용에 따른 유해성·유익성의 평가도 없이 농약사용을 규제, 농약업계가 부당하게 감수해야할 피해가 막대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약피해는 살포중 일어나는 급성 중독사고와 식품중 농약이 잔류·농축,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잔류농약 문제로 대별되는데 국내농약소비량은 70년대들어 증가추세에 있어 농약피해의 우려가 여러번 논의된바 있다.

이같은 실정에 비추어 60년대 후반부터 식품의 잔류농약에 관한 검색이 실시됐으나 각기 연구가 다르고 試料의 모집장소나 기간이 서로 달라 이들 결과만 가지고는 연차적 변화추세도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식품의 잔류농약에 의한 피해가 능성 조사는 고도의 정밀을 요구하는 것으로 식품섭취총량을 조사하고 이를 인체허용 1일 섭취량과 비교,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의도하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한건도 없다.

현재 우리나라 농약규제는 「농약관리법」에 근거, 유독성농약의 사용을 규제, 금지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잔류농약의 규제에서는 독성 실험체제 및 유익성·유해성에 대한 평가방법 확립등 법정집행과정에 앞서 수행해야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는 물론 국제기구인 FAO·WHO 합동잔류농약전문위원회같은 심의회를 구성하는 체제가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